

국민의 동원, '국민'의 형성

한국사회 '국민' 담론의 계보학*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주도적 담론,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의 기원을 추적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족'이나 '민중', '시민', '인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식민지 근대가 배태한 매우 특수하고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문화정치학적 고찰은 거의 없었다. 주체와 현실을 이어주는 일종의 이념적, 인식적 창틀로서 '국민'이라는 말이 어떠한 문맥 하에서 탄생하였는지 계보학적으로 쫓아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라는 담론의 본격적 탄생 시기를 일제 식민지 후기에 두고, 당시의 국가총동원체제가 여러 다양한 물리적 장치를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이라는 담론과 주체를 형성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사람들을 '제국의 일분자'로 동원코자 한 일제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체제가 '국민'의 배후에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 담론의 선전적 한계와 파시즘적 본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배적인 '국민' 담론에 대한 역사유물론적인 해체 작업으로서, 기본적으로 문화연구와 문화정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

주제어: 국민, 제국의 일분자, 일제 식민지, 총동원체제, 이데올로기, 가국체제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주도적 담론,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는 '국민'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추적코자 한다. 보통 사람들, 즉 인·민은 물론이고

* 본 논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eunacom@knu.ac.kr

매체와 학계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보통명사로서의 ‘국민’이 실체는 식민지 제국주의가 탄생시킨 고유명사라는 사실을 드러내 고자 함이다.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편화된 개념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규명함이며, 그럼으로써 ‘국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분명히 확인코자 하는 것이다. ‘국민’은 식민지 근현대가 빚어 낸 역사적 산물이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데올로기의 물적 기원 및 토대를 추적하는 계보학적 작업의 제안이다. 국가와 ‘국민’, 그 내부와 외부, 그 과거와 현재성의 연관을 변증법적으로 규명해내는 일이다. 최근 다양한 역사문화연구를 통해 식민지 시대 ‘모던보이, 모던 걸’, ‘만보객’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막상 ‘국민’이라는 지금까지도 존속하는 절대적 집단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부재한 모순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짝퉁다. 식민지 근대의 얼굴은 신명직(2003)이 만문만화를 통해 그리고 있는 경성을 거니는 모던보이로서 완전히 재현되지 않는다. ‘대일본제국의 국민’의 결속을 요구하는 천황제, 그리고 이에 대해 “개인의 가치와 평등한 권리 위에 선 결속”만을 긍정하면서 차라리 ‘비국민’의 길을 택한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야마다 쇼지(2002)의 이야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비국민’이라는 상상의 타자를 만들어 밀어냄으로써 초월자(Subject), 즉 천황의 시선하에서 널리 평등하고 균등한 ‘신민(subject)’를 만들어낸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일시동인(一體同仁)’으로서의 천황으로부터 평등을 획득함과 동시에 ‘일군만민(一君萬民)’이라는 무매개적인 전체에 귀속되도록 요구하는 게 바로 ‘국민’인 셈이다. 이러한 ‘국민’이라는 서구에서 유입된 ‘nation’의 번역어로서, 국가에 유용한 종속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집단 정체성으로 간주된 메이지 중반 이후 일본에서 우선 정착된다. 이후 일본제국의 역사라는 것도 국민의 확장과 비국민에 대한 억압의 역사, 총국민화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나가오, 2002). 바로 이 팽창된 ‘국민이라는 괴물’이 개화와 식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이전 ‘발견된 타자’에 불과했던 조선인에게도 이식된다. 조선인들은 더 이상 ‘국민’의 바깥, 외부, 타자로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천황 중심 식민체

제의 동질적 내부자로서 포섭, 호명되는 것이다. '미개'한 타자로서만 표상되던 조선인은 '국민'의 울타리 안에 포함이 됨으로써 '일본인'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렇듯 조선에서의 '국민'의 형성과 동원은 식민지시기를 통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30년대 중후반부터였다. 좀더 정확히 말해,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로 해서 '국민'의 담론 정치는 그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다. 남차량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5대 시정원칙'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식민지 통치방식이 내선융화에서 내선일체로 바뀌면서부터였다. 국민 총동원 파시즘 체제가 본격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는 1937년부터 45년의 해방까지, 바로 이 '신일본 건설 운동 시대'를 '국민' 완성의 결정적 시기로 본다. 이전의 '국민'적 맹아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절대적 식민/신민의 정체성으로 확정되고,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폭력적 흔적을 한국 현대사에 남기게 된다. '국민'은 제국주의 하에서 잉태되어 국가주의로 지속된다. 탈식민화와 탈'국민'화는 사실 별개의 과제가 아닌 셈이다.

1본 연구는 '국민'의 정체적 형성과 집단적 동원은 현실의 양면에 해당하며, 제국주의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일제는 식민지 확장 및 그에 따른 불가피한 외국과의 전쟁 상황에서의 승리를 위해 성별, 나이 상관없이 보다 많은 인적 자원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발적 지원을 넘어선 포괄적 동원이며, 이는 징용과 징병, 위안부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 이치로(1995/2002)의 지적처럼, 당시의 동원은 의식이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체적인 실천이었다. 전선의 규율이 일상적 배후의 규율로 전이됨으로써, 일상과 전장, 폭력과 이념, 신체와 정신이 동원의 실천을 통해 하나로 이어졌다. 특이적 다수 신체는 전체적 단일 신체로 변용되며, 이질적 다중은 균질적 '국민'으로 통합된다. 요컨대 개별적 정체가 집단적 주체로 이른바 '뭉'의 변이 과정을 겪는 게 바로 일제 하 집단동원의 경험이었다.

‘국민’의 형성은 이렇듯 인적, 물리적 자원 동원의 체계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적, 주체 구성적인 활동이었다. 자원/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즉 천황’이라는 전체주의 심성에 동화된 충성스러운 주체의 집단 (재)탄생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국민 대 비국민’의 포격적 이분법이 필요했다. 즉, 타자의 출현 가능성을 ‘비국민’이라는 탈법적 범주로 추방하는 것이 전체주의 재생산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요컨대 ‘국민’은 동원령의 성공을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이자 그 구체화된 담론적인 실천이었으며, 그로 인한 집단 주체 (재)구성의 방식이었다. 호명이며 그 결과물이었다. 어떻게 식민지는 타자를 대상화하고 배제하면서 ‘국민’이라는 일원적 주체를 구조화시켰는가? “주체와 대상이 상호 구성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푸코(Foucault, 1991/2004, 67쪽)의 관심사가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2. ‘국민’ 이데올로기의 역사유물론

알튀세(Althusser, 1971)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개인들의 실제적 존재 조건에 대한 상상적 관계의 재현(representation of imaginary relationship of individuals to their real conditions of existence)’이라고 정의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 각자의 실제적인 존재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방해하고, 이를 상상의 관계로 왜곡하는 끊임없는 표상 담론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표상, ‘국민’이라는 담론도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 생산의 역할을 떠맡는다. ‘인민/민중’으로서, ‘시민’으로서, 혹은 ‘민족’으로서 가능한 다양한 자기 존재의 조건들을 비실제적인 것으로 무효화시키고, 개인을 국가 즉 천황의 종속적 위치로 호출·배치시킴으로써 ‘국민은 천황=국가의 하위주체’라는 상상의 관계를 완성시킨다. 국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이념적 국가 기제들(ISA: the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들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그 체계모니를 관철시킨다. 본 연구가 담론 실천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서도 여전히 그 접근 방법을 당시 여러 국가 기제에 대한 물리적, 제도적 탐사와 연관시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담론은 물질적 존재성을 지닌다(Ideology has a material existence)'라는 알튀세의 두 번째 테제에 충실하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담론에 의해 구체화되고, 담론은 물질적 의례에 의해 강제되며, 후자는 물질적 이념 장치들에 의해 규정된다. 바로 이 물질성의 연쇄 고리를 통해 주체의 형성이 완료된다. '국민'의 탄생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다. '국민' 이데올로기는 표상의 지속적 실천을 전제로 하고, 이 담론 실천은 사회적으로 의례화된 방식들에 의해 통제되며, 이런 의례에 의해 규정된 담론 실천의 물질적 장으로서 이데올로기 기제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데올로기 장치 없는 담론 생산, 그로 인한 이념 실현, 주체 완성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메이지기에 근대국가 '일본'을 구성하고 국가 앞에서 (허구라고는 해도) 동등하게 평등·대등한 '국민'이라는 존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장치'가 있어야만 했다"는 이효덕(2002, 292쪽)의 지적은 바로 그 '국민'이라는 창조된 정체성이 이식된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장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기능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데올로기와 담론, 정체성에 대한 질의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그람시(Gramsci)가 힘에 의한 지배와 합의에 의한 헤게모니라는 권력의 이중통치전략을 지적했다면, 알튀세는 '폭력에 의한 기능(functions by violence)'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기능의 밀접 연관성을 놓치지 않는다. 모든 국가 기제는, 이데올로기적이든 억압적이든 상관없이, 폭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동시에 기능한다. 이는 일제 시대 '국민' 형성 및 동원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당시의 모든 이데올로기 기제들은 '국민' 동원을 위한 억압적 기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태에서 작동했다. '국민학교'의 경우, 그 자체 억압적이면서 동시에 이념적인 기제에 해당했다. 개인을 지리 공간적인 위계, 즉 분류와 질서가 개별성보다 우선하는 균질성 속으로 편입시키는 곳으로 탄생한 게 바로 '국민학교'였다. 일제는 전쟁 동원을 위

해 1938년 조선 특별 지원병제를, 패망 직후에는 조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도입코자 했다. ‘정신대’와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인간 자원의 징용’이 이루어졌으며, 경찰 등 억압적 국가 기제의 주된 기능이 바로 이러한 징용, 징병의 수행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교육령이 개정되고 국민학교제가 실시된 것은 정확히 바로 이런 맥락 하에서였다. ‘통치 즉 교육, 교육 즉 통치’라는 정무총감 오노의 발언은 학교를 ‘국민’적 주체 형성을 위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인식한 총독부의 태도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라는 것이 좌파의 이론적 상상물이 아닌, 30~40년대 전체주의 식민 정부의 정책에서도 확인될 수 있던 일종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국어’와 ‘국기’, ‘국사’ 교육이 강화되고, ‘국민 학교’는 ‘국민’ 연성의 공간인 동시에 훈육의 장소로 자리 잡게 된다. 1939년 황국신민서사가 제정되면서 통제적인 생활교육, 학교생활이 더욱 강조되며, 일탈적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의 강도도 덩달아 강화되었다. 학교 운동장 한 복판의 일장기와 교실 정면의 ‘어진영’은 ‘국민’적 규모로 학생들의 구심적인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중심으로서 초월적인 위치, 초월적 주체의 위치를 확보했다. 이처럼 식민지 후기 ‘국민학교’는 ‘국민’의 탄생을 위한 국가의 결정적 이데올로기 기제인 동시에 억압적 기제로서 작동했다. 문제는 식민의 외상을 고스란히 담은 ‘국민학교’의 역사와 체제는 비록 이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실체적 내용과 형식으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국민’ 생산의 의지는 학교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적인 (재)조직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 밖에서도 여러 ‘국민’ 조직체들이 구성된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애국반’이 만들어진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전조선 사상보국 연맹’이 결성되고, ‘국민정신작흥기간’, ‘애국일’ 등과 같은 의례가 만들어졌다. ‘국민’의 호명, 동원, 표상은 일상 속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물질화된 것이다. ‘조선문인회’가 결성되고, 소위 ‘일점(一點)’의 ‘국민문학’론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것도 이 즈음이다. ‘문화인’의 사명과 ‘문화운동’은 물론 ‘국민’의 동원이라는 국가 전체적인 기획과 결코 무관할 수 없었

다. 이와 같은 '국민'의 계몽을 위한 문화 총동원이 매체 통폐합으로 직결된다. 결국 1940년 '극비 언문신문 통제 안'에 따라 『동아일보』 등이 폐간되고, 대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국민' 이념 및 담론의 독점적 채널로 자리 잡는다. '국민' '계몽·선전'을 위한 매체 총동원이 『매일신보』등을 통해 훨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요컨대 '국민'의 형성과 동원은 물리·제도적인 층위 내 국가 기제들의 조직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기제들은 징병/징용제 정책을 위해 다양한 검찰 권력을 동원한 총독부라는 억압적 기제와 더불어 '국민학교'와 각종 '국민 조직체들', 그리고 통폐합된 매체 등 이데올로기 기제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제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성을 맺은 상태에서 '국민'의 형성, 동원을 위해 효과성을 발휘했던 그 물질적 총체성이다. 이 물리·제도적 층위는 다시 수직적으로 이데올로기·담론적 층위와 연관된다. 거꾸로 말해,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작동은 물리적, 제도적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 생산의 이데올로기, 담론 문제를 다양한 물질적 기제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입체적 접근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중요성은 두 층위를 '표리(表裏)·형영(形影)의 관계'의 관계로 파악한 당시 총독부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다음 장에서는 '국민' 형성을 위한 담론 실천의 복잡한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¹⁾

1) 이는 정운현(1997), 임종국(1966) 등의 책 작업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3~40년대 친일파 담론을 상당한 분량 수집해 놓았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것들이 사실 이들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꺼이 자기 자료를 사용토록 해준 정운현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망각된 이들 자료를 최대한 재생·재구성해 활용하는 게 또 다른 역사문화연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

3. 가국주의와 ‘국민’의 의무

‘국민’은 제국(주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국가 동원의 필요에 따라 기획된 전체주의적 기획물이다. 식민지하 조선인은 원래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법제상 ‘제국신민’으로 되었지만, 대일본제국 헌법 제 18조이하의 ‘일본신민’이 아니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인은 갑작스럽게 ‘국민’으로 호출되면서 의무를 강요받는다.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그리하여 ‘국민’의 자격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다하는 ‘국민’과 법을 지키는(준법: 遵法) ‘국민’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국민’으로의 호출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 구성원 특히 자식의 아버지에 대한 충효의 이야기와 접합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곧 천황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충의를 다하는 것이 된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 애정을 다하는 것과 같다. 거꾸로 ‘가(家)’의 정은 군신 간 ‘충’과 ‘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의무의 준법적 수행으로 완결된다. ‘의리’와 ‘인정’, ‘충군’과 ‘애국’의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있는 ‘상호 침윤적 관계’에 있다.

“충은 곧 효요, 효는 곧 충인 것이다. 충과 효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충의 대상과 효의 대상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처럼 잘못된 견해는 없다.”²⁾ 세브란스의전 학감 출신 오궁선의 다음과 같은 말은 가정과 국가, 아버지와 천황을 하나로 겹쳐 세운다.

원래 아들이나 손자는 그 부모나 조부의 아들이요, 손자이기 이전에 국가의 아들이요, 손자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개개보다 일단 높은 곳에서 이를 통합하고 운전하고, 명령하는 것이니 우리는 개개의 존재이기 이전에 국가에 속한 존재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황실을 중심으로 받드는 일대의 가국적 국가에 있어

2) 박상준, ‘반도의 자랑, 학병은 간다,’ 『매일신보』 1944. 1. 20. 정운현의 책 286쪽에서 재인용.

서는 충이 없는 효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진충(盡忠)은 곧 지효(至孝)를 포함하고 있다.³⁾

일본인은 국가, 가정, 그리고 개인의 구분을 초월하여 완전한 한 개의 몸이다. 국가는 그 몸의 으뜸이며, 머리이며, 아버지 중의 아버지이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 내 자신의 친육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아버지인 국가에 자신의 지극한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그 밖에 모든 것 보다도 더욱 신성한 국가, 생을 받아 부양되고 오늘의 교육을 받아온 조국을 위하여 이른바 '봉보'할 때가 온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들을 국가에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의 것인 동시에 국가의 것"이기 때문이다.⁴⁾ 국가는 최대 최고위의 사회이며 최강의 사회이다. 여기에는 이혼도 시비도 없고 다만 절대복종이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러한 부름에 방해되는 부모는 그 '몽(夢)을 깨(啓)해줄 상대'가 될 따름이다. 가국의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가계의 존속과 부모의 봉양, 처자의 양육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의 흥망이 핵심이며, 군국을 위한 정열이 더 뜨거워야 하는 까닭이다. 가국의 일체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정은 부정확한 집으로, 버림의 대상에 불과하다.

'일대가족국가(一大家族國家)', '가국체제'로서의 일본제국은 이처럼 개인과 부모, 그리고 국가라는 세 층위로 이어지는 역할과 관계의 매듭 없는 접합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권리와 의무의 완전한 동일화를 요망하거나 "제도상의 평등을 구하여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궁극의 이념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정말로 비황국신민적 태도"는 허락될 수 없다(최유리, 1997, 31쪽). '비국민'적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3) 오궁선, '환하게 열린 정로, 주저(征路—躊躇) 말고 곧 돌진(突進)하라,' 『매일신보』 1943. 11. 5일자. 정운현의 책 17쪽에서 재인용.

4) 이기권, '아들, 딸은 국가의 것,' 『매일신보』 1943. 11. 17일자. 정운현의 책 59쪽에서 재인용.

요컨대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이 되는 길이다. 개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몸은 내 한 개인의 것이 아니요 국가를 위하여서뿐 비로소 의의를 가졌다고 확신치 않아서는 아니되게 되니 한 개인의 일거수와 일투족이 모두 다 국가 의지를 위한 힘이 되고 의의로이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⁵⁾ 김성수는 오랫동안 종사해온 교육자의 양심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다그친다. “의무를 다하라,” “제군아 의무에 죽으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동아 건설의 1분자는 그만두고 황민으로서 훌륭히 제국의 1분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황민화를 고창(高唱)하여 온 이래 제군이 자조 자신의 황민으로서의 권리를 일반사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일본은 3천년이라는 오랫동안 금일(今日)의 제국의 영광을 빛내는데 온갖 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30년 밖에 안된다. 30년과 3천년의 차를 가지고 권리에 잇서서 평등을 요구할 수 있슬까. 이것은 제군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서양의 학술에 현혹된 잘못임을 깨달아야 한다…⁶⁾

이 때의 ‘분자’라는 개념에는 결코 분열과 해체의 징후가 있을 수 없다. 그보다는 분산적 ‘비국민’의 대타적 정체성으로서, 철저하게 전체의 심성을 반영하는 단자(monad)다. 전체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전체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의사 주권자로서의 ‘국민’에게는 권리보다 의미가 앞선다. ‘국민’은 권리의 주체이기에 앞서 의무의 신민(subject)이다. 의무,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위기 상태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봉사와 전쟁을 위한 자발적 동원의 의무를 통해 태어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국민’인 것이다. 조선의 ‘국민’에게 의무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조선인은 이제 겨우 국가와 천황의 특별한 배려로 말미암아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자격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쟁과 군대에 적극 나서는 의무

5) 김안서, ‘국가와 개인,’ 『매일신보』 1940. 11. 30.

6) ‘대의에 죽을 때 황민 됨의 책무 크다,’ 『매일신보』, 1943. 11. 6일자. 정운현의 책 20쪽에서 재인용.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 동원령의 '위대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내지인'이 오랫동안 바쳐온 희생에 필적할 임무를 조선의 '국민'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권리를 다하지 않고 '국민' 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다. 채만식도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백성을 다음과 같이 기생충에 비유한다.

나라는 백성의 모체다. 나라 있고서의 백성이다. 세상에 나라없는 백성이 노상 없음은 아니다. 그런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국기(國旗)의 배경 없는 백성은 천하의 천민이다. 백성은 나라와 운명을 같이한다...전쟁은 국난이다. 국난은 백성이 나서서 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되어 최대의 의무요 아울러 최고의 영광은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즉 전쟁에 나아가 한 목숨이 죽을 수 있는 군인될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반대로 마일 그 백성이 나라가 방금 국운을 내어걸고 전쟁을 하는 날에 몇몇이 달려나가 전쟁에 피를 흘림으로써 나라의 방패가 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나라에 대하여 한낱 불구자적인 기생충적인 부끄러운 존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충의의 극치는 거듭 말하거니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데 있다. 나라에 충(忠)하지 못하는 백성이야 무엇으로 백성 값에 갈 것인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가 37년에는 『매일신보』의 사장으로 취임한 최린도 “미영의 잔인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켜 동아의 천지에 참된 평화와 문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할 이 대동아전쟁”에 ‘우리 1억 국민의 4분의 1’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영미류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혹은 물질주의를 떠나서 스스로의 모든 것을 즉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알지 않고 어능위 아래 있는 국가의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 곧 충의 본뜻이다.” “우리 반도 민중들도 과거의 모든 잘못됨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충성을 다하여 훌륭한 국민으로서 황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대동아를 건설하는 그 결전의 마당에 달려가서 우리들의 두 어깨에 맡겨진 위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으

7) 채만식, '홍대하읍신 성은,' 『매일신보』 1943. 8. 3.

면 안 될 것이다.”⁸⁾ ‘의무’를 행함으로써 조선인은 내지인과 ‘국민’의 자격으로 평등해질 수 있다는 논리는 다음의 사실에서도 계속된다. 졸업생들에게도 특별 지원병 자격이 주어졌음을 알리면서, 『매일신보』는 제군은 “생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군국을 위하여 순정 열혈과 진충의 지성을 폭발시키라”고 다그친다.

합병 이래 30여년, 반도 동포는 훌륭한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며 내선일체의 대의를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같은 국민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떳떳한 제국신민으로서 활보 못할 심리적 공허를 느껴온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오직 내지 동포와 같이 피와 생명을 국가에 바칠 기회가 적고 또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⁹⁾

장덕수도 학병에 입영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절호한 기회”인 데, “국민된 의무를 행하여 참된 국민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역사의 진운(進運)을 계기로 아세아 대공영권을 건설하는 힘찬 실천적 과정”에 “반도의 청년학도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은 다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었을뿐더러 세계역사를 양심의 요청에 응하여야 개조하는 전사(戰士)로서, 한 개 완성된 인간으로서도 그 본분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¹⁰⁾ ‘국민’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력을 다해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순국(殉國)의 길로 나서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이다.

4. 제국의 ‘일본자’와 조선 민족(주의)의 해소

요컨대 ‘국민’은 제국의 일본자이고, 이 ‘국민’은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8) 최린, ‘양양하다 반도의 앞날,’ 『매일신보』 1943. 12. 8.

9) ‘졸업생도 지원하자,’ 『매일신보』 1943. 11. 13일자 사설.

10) ‘입영 학도에 부탁, 빛나는 정도(征途)를 축복,’ 『매일신보』 1944. 1. 17.

통해 탄생한다. 제국이 바로 '우리나라'고, 나/우리는 오직 제국의 일단을 채우는 '일분자'로서만 의미를 지닌다. 제국은 광휘를 발휘하는 절대적 선의 존재며, 그 속에는 '국민'이라는 추상적 주체와 이를 구성하는 구체적 성원으로서의 '일분자'들이 있을 따름이다. 절대적 추상 제국과 구체적일분자는 명백한 대비를 이루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전제한다. 즉, 제국은 오직 일분자로서만 존재하는 나/우리를 필요로 하며, 이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일분자는 '국민'의 구체화된 형상이며, 이제 남은 일은 각자가 자신을 죽이는 것, 다시 말해서 '멸사(滅私)'하는 것이다. 사적인 인간과 '일분자'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모순 된다. 일분자가 국가와 제국, 전체를 위해 의미를 갖는 자라면, 사적 개인은 이에 역행하는 불순하고 타기되어야 할 이기주의자의 낙인을 면할 수 없다. 일분자의 탄생은 따라서 개인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신을 바쳐야만 우리 개개의 자신도 구원된다."¹¹⁾ 이것이 바로 일사봉국(一死奉國)의 정신, 즉 '국민'됨의 길이다.

사실 '일분자'는 제국 내부에 허락되는 유일한 개체의 위치로서, 파시즘의 정체성에 다름 아니다. 일분자는 제국에 '적성(赤誠)에 넘치는 충혼'을 바칠 주체이며, '황은에 통보하는 국민'의 절대적 의무를 다할 주체이다. 반도는 청년 "제군의 용맹 과감한 투지를 통해서 황국의 1분자로 그 양양한 미래를 명시하게 될 것이다."¹²⁾ '크나큰 역사의 차륜이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개인의 자유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있고 비로소 개인이 있기 때문이다. 각자는 한결같이 '일환(一丸)'이 되어 역사적 필연 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국가적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다. 제국의 일분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참된 의미의 생을 깨닫는 것이며, 소아(小我)에서 벗어나 대의의 정신을 파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화(大和) 민족'의 혈통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다.

11) 안재홍, 『매일신보』 1943. 11. 15. 정운현의 책 32쪽에서 재인용.

12) 현상윤, '사(士)는 국지원기(國之元氣), 멸사, 구원의 생을 찾자,' 『매일신보』 1943. 11. 9. 정운현의 책 28쪽에서 재인용.

이제 내선일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두가 의무를 다하는 일 분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일본 신민 즉 일본 민족으로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국민’이고 또 민족이다. ‘국민’과 민족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보잘 것 없는 초라한 것이나마 열과 성으로 국가에 바쳐 만분의 일이나마 국은(國恩)에 보답”해야 할 ‘국민’이 되는 것은 ‘단일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천황폐하의 아래서 생사를 같이하고 영고(榮枯)를 함께 할 한 백성일 뿐이다. ‘내지’와 ‘조선’의 구별적 존재를 허락지 않는 한 민족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종족을 캐자면 다를지 모르나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금은 합체된 단일민족이다...¹³⁾

이러한 논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율전강(律田剛)에 따르면, “내지와 조선은 멀리 신화시대부터 깊은 관계가 있고,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같은 뿌리를 갖고,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관계는 지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 동아의 정세가 현저히 그 유기적 연관성을 높িয়ে 됴으로써 당연한 귀결로서 양자가 합일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원령을 적극 주도한 녹기연맹의 전전방부(森田芳夫)도 다음과 같이 조선과 일본의 역사를 하나 됴므로 풀이하고 있다.

조선과 내지는 오랜 옛날 땅이 연결되어 있었다. 신(神) 시대부터 대단히 깊은 인연이 있다. 그와 같이 1300년 전까지는 어능위(御陵威)는 반도에 빛나고 있었다. 많은 조선인이 귀화하였다. 인류학적으로 보아도 차별이 없었다. 혈액형은 물론 언어상으로도 제일 가깝다. 고고학적으로 보나 민속학적으로 보나 실로 깊은 일체관계가 보인다. 세계에서 내지인에 가장 가까운 민족을 구하면 조선인이고, 조선인에 가장 가까운 민족을 구하면 내지인이다. 지금 세계를 하나로 하려는 이상을 높이 쳐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민족이 따로 따로 나아가겠는가(임종국, 1966, 167쪽).

13) 김동인, ‘감격과 긴장,’ 『매일신보』 1942. 1. 23.

이러한 역사적 해석이 곧바로 '국민'의 형성과 동원에 전위로 참여한 당시의 조선인 '지식인', '문화인'들에 의해 받아들였다. 그람시가 말한, 국가 권력의 '지적, 도덕적 지도력' 발휘를 위한 '지식인'의 역할과 너무나 유사하다. '조선민족의 발전적 해소'라는 글에서 김문집은 조선인들이 상고에 귀환할 것을 다그친다. 왜냐하면 일본어와 조선어가 동일계열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大和), 조선 양측 지역의 혈액적 문화적 일체의 양상관계는" "경기도와 충청도와 사이의 그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선일체란 신생어의 내용은 기실 내선(內鮮)의 상고적 귀원(歸元)에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 우리에게 남은 유일의 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지인과 동족이 되어서 일체의 의무와 권리를 동일하게 향수하는 황국신민에의 길일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¹⁴⁾

이광수도 이러한 주장에 적극 동조한다. 2,000년 전에 "내선(內鮮) 양 민족은 피를 함께 한 민족이다." 백제의 자손들이 내지로 들어가 1,800만 명에 이르는 '혼혈한 완전한 일본인'이 되었으며, 황실에도 조선의 피가 섞여있다. 이처럼 "내지인과 조선인의 피는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충의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및 우리의 예술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¹⁵⁾ 이광수는 "조선인이란 단일한 것으로 관념한 것이 근본적인 착오였다"고 결론 내린다.¹⁶⁾ 남은 것은 조선인이 '그 민족 감정과 전통의 발전적 해소를 단행'하는 일이며, "하루라도 속히 황민화가 될 수록 조선민족에게는 행복이 오는 것"이다.¹⁷⁾ 문화(인)의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연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고. 이 속에 진정

14) 『조광』 1939. 9월호.

15) 이광수, '신체제하의 예술의 방향,' 『삼천리』 1941. 1월호.

16) 이광수, '조선문학의 참회(懺悔), 『매일신보』 1940. 10. 1.

17) 이광수, '국민문학의 의의,' 『매일신보』 1940. 2. 16.

으로 조선인의 영생(永生)의 유일로(唯一路)가 있다고. 그러므로 조선인 문인 내지 문화인의 심적(心的) 신체체의 목적은 첫째로 자기를 일본화하고 둘째로는 조선인 전부를 일본화하는 일에 전 심력(心力)을 바치고 셋째로는 일본의 문화를 양양하고 세계에 발양하는 문화 전선의 병사가 됨에 있다. 조선문화의 장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리하기 위하여 조선인은 그 민족감정과 전통의 발전적 해소를 단행할 것이다. 이 발전적 해소를 가리켜서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¹⁸⁾

민족주의라는 ‘인류사상 보지 못한 거화(炬火)’에서 벗어난 실패한 사상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이기주의적 구태에 불과하다. 물론 이때의 민족주의란 조선반도에 제한된 특수한 민족주의를 가리킨다. 즉, 민족(주의)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조선인들의 민족적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대화민족’은 보편의 민족주의로서 오히려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광수를 비롯한 많은 식민지 지식인, 문화인들이 주창하는 ‘국민’됨의 조건으로서 ‘민족주의의 해소’란 다름 아닌 조선민족의 대화민족으로의 해소를 가리킨다. 한국인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은 부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일본인이다’라는 ‘국민/민족’적 자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서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되는 것은 하나의 일본민족이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도지원병 원서를 내고자 결심한 경성법학전문 1년생인 하산정의(夏山正義)가 함께 느낄 것을 주장하는 ‘민족의 호흡’이라는 것도 다름 아닌 일본민족의 호흡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민’이자 일본인이며, 조선은 그 외부 혹은 외적으로서 오래전 지워야 했을 타자의 흔적점으로 규정된다. 그에게는 일본인으로 살고 일본인으로서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국민’의 최고 명예이다.

출원하던 전날 밤 나는 심야의 적막속에서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전장에서 술 의를 입고 서 있는 자기자신을 눈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이곳 저곳에서 해방된 민족들의 환호성을 들었다.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는 한 번도 신주

18) 이광수, ‘심적 신체체와 조선문화의 진로’, 『매일신보』 1940. 9. 4.

(神州) 일본에 외적의 침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외적의 비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격쇄하여왔다. 그만큼 우리는 전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싸워왔다.¹⁹⁾

이와 같은 국민/일본민족의 접합은 구적 미영을 상대로 한 성전이라는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더욱 강화된다. '국민'의 총동원에 동원된 문화인, 지식인들은 전쟁을 오랫동안 당해 온 '황인종'의 설분을 풀 기회라고 소리 높인다. 서양의 인종주의를 고발하고 최후의 인종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주요한 뿐만 아니라 정비석, 정지용, 장덕수 등 다양하다. 이들이 보기에 "미·영은 동양인종을 압박하려고 하고, 일본은 그것에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고급 미증유의 커다란 인류의 움직임"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동아 전쟁의 잠재력"이다. 국민은 이제 '인종'의 이데올로기와도 접합된다. "최후의 우리들은 후방 국민으로서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유색인종의 일인으로서도 가장 긴급한 대동아전쟁의 대성전을 필승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매진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⁰⁾ "동아의 각 민족은 그 인종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당연히 운명적인 사상 감정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의논한 건설적 사업인" 동아 공영권 확립을 위해 "우선 침입자이며 장애물인 공동의 적을 타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²¹⁾ 좌익 사상까지를 포함하는 서양의 문화를 인종(주의)적인 틀로 가공함으로써 '국민 대 비 국민'의 배타적인 이분법의 정체성을 담론적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²²⁾

19) 夏山正義, '국가 있고 개인도 있다,' 『매일신보』 1943. 11. 6.

20) 최동, '앵글로 색슨인 민족과 국가의 유색인종에 대한 태도,' 『동양지광』 1942. 2월호.

21) 박희도, '일본은 왜 싸우는가,' 『동양지광』 1942. 2월호.

22) 인종(주의) 담론은 '국민'의 형성 및 동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양적인 이유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별도의 논문에서 사후에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5. 역사의 전유, 기억의 재 발굴

이러한 조선 민족주의의 해소 주장은 역사에 대한 부정적 재 기억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문약론’은 그 대표적 태제다. 조선의 선조들은 ‘국민’의 출진을 가로막는 명예롭지 않은 전통을 남긴 존재에 불과하다. 부끄러움의 존재이다. 바로 이처럼 새롭게 기억되는 역사적 전통이 현재의 ‘국민’적 자격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과거 수 백 년 동안 너무나 문약(文弱)에 치우쳐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실력에 의하여 처결(處決)되는 이 때 제군이 자신을 무장하고 나서려는데 이 과거의 폐풍(弊風)이 혹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²³⁾ 실력 무장이 역사적 선택이며, 문약은 조선의 역사적 전통으로 그려지면서 이를 훼방하는 과거의 폐풍으로 지목된다. 현재 조선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명예는 무(武)를 등한시한 조산의 탓이다. 즉, 우리의 책임이다 ‘국민’으로의 동원과 지원병제에의 참여를 통한 명예 회복의 책임이 새로운 ‘국민’ 주체들에게 있다. 적대국의 청년들보다도 더 혁혁한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무능 무력한 반도의 과거 문약을 타파하고 호반(虎班)의 전통을 창조하는 것이 ‘국민’의 자격을 갖춘 조선 학도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선택이다.

고려말엽부터 시작되어 이조 내내 강화된 나약함의 사상은 기억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조시대는 병무에 몸을 둔 자를 군총(軍總)이라는 특수계급으로 분류하여 세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고, 이와 같은 문약의 폐단으로 인해 외부인들로부터 고식무위(姑息無爲)라는 치욕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무사정신의 쇠미(衰微)가 오늘날 무기를 들고 대동아 성전에 ‘치참(馳參)’하려는 학도들에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약한 과거와 반드시 결별해야 한다. 문약한 조선 역사는 ‘국민’됨을 방해하는 요소일 따름이다. 반대로 무의 기억은 정치적 문맥으

23) 양주삼, ‘호반(虎班) 전통을 창조, 적국의 학생병을 치자,’ 『매일신보』 1943. 11. 8. 정운현의 책 23쪽에서 재인용.

로부터 완전하게 탈화되어 적극 전유된다. 무의 기억은 그것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이든 관계없이 회수된다. 심지어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 바로 일본의 왜적을 상대로 했던 무력행사의 기억도 황국을 위한 현재의 동원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접합되어 쓰여 진다.

돌이켜 생각하여 본 즉 반도인이 과거에 있어서 무기를 손에 잡아보기는 거금(距今)수 백 년 전 임진전역(壬辰戰役) 때이고 그 후 오늘이 처음이다. 지금 우리가 대동아 성전을 계기로 이 위대한 역사적 무대에 황국신민의 일분자(一分子)로 스스로 총검을 들고 나서게 된 것은 실로 감개무량한 바 있다.²⁴⁾

무를 망각한 반도가 그 기억을 다시 부활시킨 것은 이처럼 '대동아 성전'이라는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모든 '국민'이 황군의 일분자로서 분담하여 일어서면서부터이다. 김성수가 보기에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는 '일대 감격이며 일대 영광'이다. 왜냐하면 징병제 실시로 인해 '우리'는 문약의 병폐를 일소하고, '투안(倭安)'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근고(近古)이래 태평에 찌들어 인순고식(因循姑息) 무위문약(無爲文弱)을 일삼게 된 데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 "제군의 출진을 보게 된 것은 황국의 일대성사일 뿐 아니라 반도누년(半島累年)의 적폐(積弊)를 일소하고 2천5백만의 전도(前途)에 대광명을 가져오는 것으로 축복하여 마지안"을 일이다.²⁵⁾

"우리가 이제야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의 자격을 얻게된 것은 일방으로 전반도 청년의 영예인 동시에 반천년(反千年) 문약(文弱)의 분위기중에서 신음하던 상술한 바 모든 병근을 일거에 쾌치(快治)하고 거일(去日) 신생할 제2의 양질을 어든 것이다. 엇지 반갑지 아니하며 엇지 감격치 아니 하리오. 하고(何故)오하면 상술한 문약의 병증(病症)을 치료함에는 오직 상무(尙武)의 기풍을 조장함이 유일무이한 양약인 까닭이다."²⁶⁾

24) 안재홍, 『매일신보』 1943. 11. 5.

25) 『매일신보』 1943. 12. 7일자.

26) 『매일신보』 1943. 8. 5. 이 글에서 김성수는 '아등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하

장덕수도 ‘승고한 의’무에 대하여 ‘제군의 결의를 축(俶)하면서, “과거 오랫동안 반도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중단되어 무사(武士)정신을 몸으로써 경험하여 본 적이 업”음을 마치 유감인양 표시한다. “제군이 국가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지 학도처럼 선뜻 일어서지 못한 것은 결코 제군의 무능한 탓이 아니오 제군의 선대와 제군의 역사의 소치일른지도 모른다.” “드디어 제군은 제군이 선대 반도의 과거가 일찍이 경험치 못한 위대한 창조자가 되었다. 상무정신을 망각해 온 날근 사상을 물리치고 제군은 마침내 정도를 택하여 총궐기 한 것이다.”²⁷⁾ 무사정신을 결(缺)한 이조의 역사를 극복하고 문약한 조상과 결별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고구려의 상무정신, 신라의 화랑도를 다시 찾아야 한다. “용감히 용의(戎衣)을 떨쳐입고 국민적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우리의 상무정신을 새로이 계승”해야 한다.²⁸⁾ 이 신라의 기억은 바로 역사 이전 신화의 기억이며, 반도에 새롭게 부활되어야 할 것도 바로 이 신화이다. “반도의 과거가 신화정신과는 너무도 떨어진 세계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윤리적 폐허현상을 극복해야 한다.”²⁹⁾ 주요한도 “조선의 지도자는 갑오래(甲午來)의 비동아적 오류를 반복하지 말고 결연히 천손(天孫)시대의 내선 동근의 자주 신앙을 심고(審考)하여 천재일우인 동아 구원의 기(機)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인은 모름지기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태양의 자손으로 자인하고 태양을 숭배하던 그 당시의 동방민족적 사상은 고대 일본의 신도(神道)와 동근(同根)임은 물론이다. 아(我) 일본이 유신 진전이 항

야 써 단결을 굳게 하자’는 황국신민서사의 두 번째 구절과 관련하여서도 조선인 ‘종래의 결점’을 다음과 같이 들먹인다.

“이 일절이야말로 종래 우리 조선인의 정문(頂門)의 일침(一針)이다. 우리 종래의 모든 결점이 오로지 호상신애협력을 못하는 것과 그 결과로 10인 10색, 100인 100기(幾)로 단결이 되지 못하는 바 있든 것이다.”

27) ‘입영학병에 부탁, 빛나는 정도를 축복,’ 『매일신보』 1944. 1. 17.

28) 안재홍, 『매일신보』 1043. 11. 5. 정운현의 책 30쪽에서 재인용.

29) 오정민, ‘현대와 신화,’ 『매일신보』 1943. 4. 29.

상 복고의 대기차하(大旗幟下)에 진행되는 이러한 동방자주적 정신의 힘이다. 신화시대의 내선 동근에 복귀함은 곧 내선이 금 세대에 있어서 일차 단결 동아의 자유 해방을 완수함이다.³⁰⁾

이병도는 역사가답게 왜 우리가 신라의 화랑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이조 5백년의 그릇된 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조선인은 문약과 인습적 가족제도의 폐단인 남존여비 사상에 빠져들었다. 상무정신과 충군애국의 사상이 희박한 결함도 이조의 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폐단에 지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조선민족이 문약했던 것은 아니다. 신라의 화랑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화랑 이야기를 적극 전유한다. 관창의 이야기와 세속오계가 '국민'의 동원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외적에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역사적이게도 일본민족을 위한 동원의 이야기로 전유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국가에 불안하고 대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충도를 행하여 국난을 막기를 맹세한 것”이라는 경주에서 발견되었다는 돌에 새겨진 문헌도 “학도출진의 동원령 아래 장차 결전장으로 나아가게 될 반도의 학도들에게는 한층 더 감명이 깊은 문헌”으로 엉뚱하게 해석된다.³¹⁾ 장혁주도 전쟁의 전개에 따라 조선의 황도화가 더욱 촉진되고, “조선의 황도화에 의하여 조선 자체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이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반도 학도는 모두 쫓겨하고 있다. 나는 제군의 그 마음을 성스럽다고 칭찬한다. ‘이제야 가겠다.’ 그리고 전장에 나아가서는 무퇴의 계율을 엄연히 지키어 적중에 돌격하는 정에 무비의 저 화랑, 장대한 화랑의 정신을 재현하고자 할 것이다. 부디 제군은 천년 전의 그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 주길 바란다.³²⁾

30) 주요한, ‘적, 미영의 사상책략,’ 『신시대』 1944. 10월호.

31) 이병기, ‘어머니의 군센 격려, 전투용기를 백 배나 더하게 한다,’ 『매일신보』 1943. 11. 26.

32) 장혁주, ‘학도병출진격려사,’ 『매일신보』 1943. 11. 11.

일찍 신라의 국민동원 강행기에 당시의 청년심리를 대표하였다 할 귀산(貴山), 방정(幫頂) 양인(兩人)이 일세의 고덕(高德)인 원광법사에게 가서 이에 대한 필요를 물었을 때 법사가 세속(5)계를 말하고 특히 ‘임전무퇴’¹⁾조를 강조하며 시대청년의 심로(心勞)가 이 일침에 탁 터져서 아무 지의(遲疑)함 없이 제시광란(濟時匡難)의 대업으로 출진하였었다. 뒤에 보면 ‘임전무퇴’라는 한 어구가 진실로 평범하여 기이한 것은 없지마는 당시 청년에 대한 ‘망상(妄想)’의 통봉(痛棒)으로는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³³⁾

임전무퇴(臨戰無退)는 특히 화랑도 정신 가운데서도 강조된다. 위에서와 같이, 최남선 또 현재적 담론을 통해 주형하려는 ‘국민’의 정체성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발굴해 낸 신라인의 이미지를 투사한다. 원광법사와 세속법사의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으로 창고에서 꺼내 역사로 재현한다. 그는 ‘성전이다!’라는 일념으로 죽음의 길에 나서야 할 깨달은 청년들에게 원광법사의 임전무퇴 4자를 선물코자 한다. 그에 따르면, 천리(天理)와 공리(公理), 그리고 대세 외에 각자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성전에 참가하는 것이 유일한 ‘대운(大運)중의 대운’이다. 이제 청년들은 공론을 집어치우고 선선하게 역사적 임무를 져야 한다. “임전무퇴의 정신에 불타는 옛 신라 향도(香徒)를 생각하라. 용감히 싸울지어다. 한 사람도 비겁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순정무구한 진충(盡忠)의 정신과 장엄무비한 순국의 기상을 가지고 나서라.”³⁴⁾ 이것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소리 없이 나서는 일본 무사의 미덕과 일치한다. 신라 청년들의 의기와 용감성을 이어받는 것이 다름 아닌 일본인, ‘국민’을 수혈 받는 것이다. “호국의 꽃으로 사라져 정국(靖國)의 신으로서 영원히 나라와 함께 살아있는 그 죽음, 이것이 일본인의 죽임인 것이다.”³⁵⁾ “무퇴의 계율을 엄연히 지켜 적중에 돌격하

33) 최남선, ‘보람있게 죽자, ‘임전무퇴’ 공론무용,’ 『매일신보』 1943. 11. 4. 정운현의 책 16쪽에서 재인용.

34) 김두헌, ‘학병이여, 잘 싸워라,’ 『매일신보』 1943. 11. 22. 정운현의 책 27쪽에서 재인용.

35) 岩本壯雄, ‘용감히 순국의 길로,’ 『매일신보』 1943. 11. 7.

는 정예무비의 저 화랑, 장대한 화랑의 정신을 재현하고야 말 것”이 바로 “모두 일본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과 같다.³⁶⁾

6. 청년 남아론과 어머니

청년은 바로 이러한 문약론을 청산하고 화랑도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재무장해 나서야 할 ‘국민’의 선봉이다. 1939년 9월 24일에 국민정신 총동원연맹의 전위부대로서 각도에 연합청년단이 결성되고, 이에 맞춰 여러 조직화된 ‘청년’ 담론들이 매체를 통해,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했다. 사실 청년 이야기는 ‘국민’ 담론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남선은 ‘일본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남아의 의기’를 모순됨 없이 쓸 수 없다. 『매일신보』는 “청년은 년(年)이 부(富)하고 력(力)이 강하여 고금사상의 모든 역사적 진운은 청년의 손으로 지은에가 허다하다”면서, “특히 평시의 생업보국에나 비상시의 민중지도에나 청년이 항상 그 추진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고 있다.³⁷⁾ 8월말까지만 해도 ‘등화가친(燈火可親)-학생제군의 면려할 시기’라는 제목으로 “공연히 잇기 쉬운 유언비에 귀를 기울이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저 각자의 학업에만 각고 면려하기를 항상 자경 자경(自警)할지어다”³⁸⁾라고 근신을 다그치던 『동아일보』 또한 곧 다음과 같이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벌써 그 자체가 현사회의 꽃이요 미래 사회의 주인이다. 심기 자못 추천하는 바 잇거늘 그 우에 조직을 주고 활동할 모든 편의가 제공되었스니 이것을 말하여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할 것이다. 아직 조직에 들지 못한 청년은

36) 장혁주, ‘화랑도 정신의 재현’, 『매일신보』 1943. 11. 11. 정운현의 책 254쪽에서 재인용.

37) 『매일신보』 1939. 9. 25.

38) 『매일신보』 1939. 8. 29일자 사설.

청년단의 기치에로 참집할 것이며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이 청년단에 참집하여 전 노력을 바쳐야 할 것이다.³⁹⁾

청년은 절연되어야 할 과거의 선조, 타파되어야 할 구태의 기억과 대비되는 미래의 ‘국민’, 제국의 가장 중추적 일부자다. 과거의 인습과 낡은 사상에서 벗어난 새로움의 존재다. 미래의 ‘국민’이고, ‘국민’의 미래다. 요컨대 청년은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 ‘국민’적 인간형이다. 청년들은 빛나는 세계사를 피로서 엮는 ‘광영에 욕(浴)하는 길’과 ‘영원히 노예적 생활에 국척(蹶躅)하는 길’ 두 개 중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답은 명백하다. 후자의 길을 택함으로써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다. 징용에 응하지 않는 것은 ‘거짓 황국신민’의 낙인’을 찍는 짓이다. 징병에 “지원하지 않는 자는 비 국민이 된다.”⁴⁰⁾ 현재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미래의 역사를 다듬하는 청년들의 다듬이다. 청년은 국가의 주동력이고, 모든 국가는 그 실력으로써 제 문제를 치결하려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청년이 전쟁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논리다. “현하 전국의 결전(決戰)은 주로 각국의 청년 대 청년의 결전”이라는 양주삼의 정의⁴¹⁾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대표한다.

대동아의 주변을 둘러싼 각 결전장에는 적 미·영의 청년은 물론 세계 각국 각 민족의 청년이 나타나 사력을 다하여 싸우고 있다. 이 젊은이의 결투장에 나선 제군이다. 제군의 혈관 속에 젊은 혈조가 뛰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력이 아직 비등하고 있다면, 제군은 사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고 싸울 것이다.⁴²⁾

39) 『동아일보』 1939. 9. 23일자 사설.

40) 한상룡, ‘아세아 위해서 나서라,’ 『매일신보』, 1943. 11. 19. 정운현의 책 269쪽에서 재인용.

41) 양주삼, ‘호반전통을 창조, 적국의 학생병을 치자,’ 『매일신보』 1943. 11. 8. 정운현의 책 23쪽에서 재인용.

42) 정구충, ‘전투력 기초는 체력,’ 『매일신보』 1943. 11. 25.

지금의 세기는 젊은 피, 젊은 생명을 부르고 있다. 각국의 청년은 모두 세계 각처의 전선을 향하여 일어섰다. 민족의 존망, 국가의 부침을 책임지고 전 세계 모든 젊은이가 국가를 이름 높여 부르면서 결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 학도들도 기꺼이 이 세계의 결전장에 젊은 생명을 바쳐야 한다. 모든 “젊은이들이 아우성치는 와중에서 홀로 반도청년만이 안한히 좌시하고 있을 수 있을까?”⁴³⁾ 경성제대 법문학부 2학년 재학생인 金本光治가 보기에든 육본군특별지원병제는 은전에 육(浴)하여 “피끓는 젊은 생명을 유구한 황국의 대생명에 융합시켜 불멸의 역사에 설 수 있는 광영의 길”이다.⁴⁴⁾ ‘순결한 혈조(血潮)’로써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참가하는 것이 바로 젊은 청년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학도들은 ‘국민’으로서의 일대 의무와 더불어 청년으로서의 기개를 보여줘야 한다. 청년학도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부과된다. “일국의 사(士)로서 다른 일반 국민보다 수문연무(修文鍊武)에 일층 더 힘써온 제군이 명철한 판단과 학교한 신념을 가지고 단연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요컨대 청년은 일반 ‘국민’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

청년은 가정 내에서도 그 역할이 부여된다. 사실 가국체제하 ‘국민’의 책임은 가정 안팎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과거에 너무나 은둔고식(隱遁姑息)을 일삼고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해온 전통적인 가정이 장애물로 지목된다. 혈기 찬 청년은 ‘황군의 일원’으로서 출진을 결의함으로써 바로 이 폐풍을 일소하고 “종전과 같은 무(武)를 등한시 하여온 가정을 개량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만일 가정사정을 운위하고 그 결의를 천연(遷延)한다면 이는 청년다운 결단성을 결한 자신의 무력(無力)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⁴⁶⁾ 이제 청년에게는 과거의 인습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

43) 梁川勝男(경성고등학교 1년), ‘일편단심 진추오국,’ 『매일신보』 1943. 11. 5.

44) 金本光治, ‘결전장을 달리는 학도의 열정,’ 『매일신보』 1943. 11. 3일자.

45) 현상윤, ‘사(士)는 국지원기(國之元氣), 멸사, 구원(久遠)의 생을 찾자,’ 『매일신보』 1943. 11. 9일자. 정운현의 책 27쪽에서 재인용.

46) 현상윤, ‘사는 국지원기(國之元氣), 멸사, 구원의 생을 찾자,’ 『매일신보』 1943.

면 황국신민으로서 일대 비약을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물론 해답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반도는 반드시 청년학도의 손으로 빛나는 황국신민의 광영을 완수할 것”이 이미 자명한 진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의 청년은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을 갖춘 ‘황국의 남아’이다. “군국(君國)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바침은 남아 일생의 본회(本懷)”라는 김두헌은 이러한 생각⁴⁷⁾을 집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국민’됨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군국의 어머니,’ ‘총후의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남이다. 그럼으로써 가국을 지키고, 가정을 청년 ‘국민’ 양성의 터로 만드는 몫이다. 당시 여성의 조직화는 매우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경성의 16개 여고 졸업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경성중등여학교 동창회 연맹’이라는 것이 총독부의 지휘로 조직되었고, 결성식에서는 ‘경천경조(敬天敬祖), 국체의 존엄을 인식하고 자녀의 교양·체위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1938년에는 김활란을 단장으로 한 애국자녀단이 결성되었고, 조선부인문제연구회는 축제일의 국기계양, 총독부의 의례준칙의 준수, 자녀의 근로정신 함양 등을 내용으로 한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의 기본양식’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를 선전하기 위해 순회강연반이 결성되었다. 소위 총후부의 진영을 망라해 ‘조선임전보국단 부대’가 발족했고, 42년에는 20세 미만의 미혼자를 제외한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로 통합되었다(임종국, 1991).

이제 모든 게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모운숙은 “미영을 격멸할 자는 아세야요, 대일본제국이요, 국가의 뒤에서 밀고 나가는 원동력은 아내요 어머니이다”라고 강조한다(임종국, 1966, 220쪽). 여자의 구실, 어머니의 구실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 이는 결혼해서 가정에 안착한 기혼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여성은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다. 그 이전처럼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던

11. 9일자. 정운현의 책 28쪽에서 재인용.

47) 김두헌, ‘학병이여, 잘 싸워라,’ 『매일신보』 1943. 11. 22. 정운현의 책 37쪽에서 재인용.

결'과 같은 여성은 한 마디로 '나쁜 여성', '반 여성', '비국민'이다.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의무라는 것도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국민'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 후예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것이 여성 교육의 목표다. 이를 김활란은 “먼저 국어를 가르쳐서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량을 지니게 하고 따라서 내지여성에게서 본받아야 할 훌륭한 부덕을 가르쳐서 황국여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자격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고 좀더 부연 설명한다.⁴⁸⁾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결전부인대 강연회에서 최정희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귀하고도 높은 오직 우리의 아들들의 뜻을 받드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신의 뜻을 받드는 여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남과 같은 여자 구실을 할 것이요, 그래야만 우리도 남과 같은 어머니의 구실을 할 것입니다. 온 세상, 푸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의 아들들을 나라에 바치는데 우리라고 못 바칠 게 무얼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못해서 남이 하는 대로 못합니까. 눈이 없습니까. 코가 문질러졌습니까.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졌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못할 것입니까. 여러 분은 재발, 부디 '엄만 틀렸어'라는 말을 여러분의 아들한테서 듣지 마시는 강한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신 앞에 맹세합니다. 여성은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⁴⁹⁾

1941년 2월 7일 『매일신보』가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김동환은 “만일 지원병의 어머니가 교양 있는 부인이라면 현재 지원병 수에서 몇 배 더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원병의 어머니도 문화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부가 금후 일해 나갈 방책의 중점은 이 문화에 뒤떨어진 2천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⁵⁰⁾ 소년 병의 ‘어린 날개’

48) 김활란, ‘감격과 가중한 책임,’ 『매일신보』 1944. 1. 4. 정운현의 책 286쪽에서 재인용.

49) ‘군국의 어머니,’ 『대동아』 1942. 5월호.

50) ‘문화의찬의 반도체제를 말하는 좌담회,’ 『매일신보』 1941. 2. 12~19.

가 “적의 숨을 끊을 때까지 사막이나 열대나 솟아 솟아 날아가”⁵¹⁾고 있을 때, 후방의 여성들은 새해를 맞이해서도 상 차려 즐길 수 없다. “비단치마 모르고 연지분도 다아 버린 채 동아의 새 언덕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새날의 딸 동방의 여인”이다.⁵²⁾ 모운숙은 그 외에도 ‘어머니의 힘’(1942. 3. 9일자), ‘아가야 너는’(1943. 5. 27일자), ‘내 어머니 한 말씀에’(1943. 11. 12) 등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를 『매일신문』에 발표 하였다. 『매일신문』에는 그 외에도 노천명의 여러 편의 시도 실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였다면 총을 메고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갈 수 있었으리라 아쉬워 한다.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 입”을 수 있을 것이다.⁵³⁾ 결국 여성은 부인 근로대에 나섬으로써 ‘출정(出征)하는 동생’⁵⁴⁾을 대신해야 한다.

부인근로대 작업장으로

군복을 지으러 나온 여인들

머리엔 흰 수건 아미 숙이고

바쁘게 나르는 흰 손길은 나비인가.

총알에 맞아 뚫어진 자리

손으로 만지며 기우려 하니

탄환을 맞던 광경 머리에 떠올라

뜨거운 눈물이 피잉 도네.

한땀 두땀 무운을 빌며

바늘을 옮기는 양 든든도 하다

일본의 명예를 걸고 나간 아여

51) 모운숙, ‘어린 날개,’ 『신시대』 1943. 12월호.

52) 모운숙, ‘동방의 여인들,’ 『신시대』 1942. 1월호.

53) 『매일신문』 1943. 8. 5.

54) 노천명이 1943년 11월 10일 『매일신문』에 실은 시의 제목이다.

홀륭히 싸워주 공을 세워주.

나라를 생각하는 누나와 아름다운 정성은
오늘도 산 만한 군복 위에 꽃으로 피었네.⁵⁵⁾

이와 함께 강조된 것은 '스파르타의 어머니'라는 군국적인 이미지였다. 청년들에게 사무라이 정신이 강조된다면,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군국의 어머니'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며, 국가에 제대로 의무를 다 하는 길이다. 조선의 어머니는 '국민'의 2세를 키워 징병에 보내야 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첫째로 추위와 더위에 견디고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 아니하”고, “둘째로 힘든 일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세째로는 어른께 복종하는 버릇”을 가지며, “네째로는 일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 것이다.⁵⁶⁾ 이것이 바로 '상무적 교양'에 힘써 '군국의 어머니'가 되고 '총후의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자격을 위한 반도여성의 선택이다. 여성/어머니는 청년들에게 상무 정신을 기르는 것과 함께 스스로 무사가 되어야 한다. 무사가 강한 것은 그 어머니가 굳센 탓이요, 어머니는 그 시대의 상무적 교양으로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상무정신은 스스로가 무사로 변신해 무사를 재생산하는 가정의 책임이고, 바로 그 가국 재생산의 역할을 떠맡은 여성/어머니의 의무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의 무사가 강했다는 것은 곧 '스파르타'의 전통적 상무 정신에 기인하는 것이며 상무적인 시대적 교양을 받은 '스파르타'의 여성이 굳센 때문이다. 아들이 출진할 때 '스파르타'의 어머니는 창과 방패를 주며 훈계하여 말하기를 '창으로 적을 찢러 죽이라. 그렇지 못하면 전사하여 방패에 실려오라고 했다지 않는가...⁵⁷⁾

55) 모운숙, '부인노동대,' 『매일신보』 1942. 3. 4일자.

56) 이광수, “징병과 여성,” 『신시대』, 1942. 6월호.

57) '출진학도에게 보내는 말,' 『매일신보』 1943. 11. 26.

스파르타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화랑 어머니의 이야기와 겹쳐진다. 김유신이 어릴 적의 잘못을 뉘우치고 훌륭한 장군이 되어 큰 공을 세운 것도 훌륭한 상무적 교양을 갖춘 어머니의 덕택이다. 그의 아들인 원술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와 대면하지 않으려는 어머니에게서 아들교육의 엄격함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탈맥락화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전쟁터에 나설 수 있는 용맹한 ‘국민’의 탄생을 위해서라면 역사는 조선의 것이든, 서구의 것이든 상관없이 유용하게 현재를 위해 전유된다.

7. 나가면서: ‘국민’과 ‘다른 사람’되기

‘국민’의 이데올로기, 담론의 기원을 추적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틀이었다. ‘국민’이라는 것이 물적인 기원을 분명히 지닌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 연구를 출발시킨 근본적 문제설정이다. ‘국민’은 ‘천황의 홍원(鴻源)한 은(恩)과 광대한 인(仁)에 적성봉공(赤誠奉公) 충과 의를 다하는 일념보국의 민서(民庶)’로 역사적으로 정의된다. ‘천업(天業)을 익찬하고 천황에 귀일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신민(臣民)’이 바로 일제 시기 ‘국민’에게 지정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였다. 일제 시대 이처럼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정체성으로 작동 한 ‘국민’은 ‘비국민’이라는 타자를 필요로 했다. ‘비국민’이란 다른 아닌 ‘전체(주의)적’ 정체성에 적대하는 ‘불량자’들었다. 민족주의자, 자유주의·개인주의자,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비국민’에 해당했다. ‘천황 즉 국가’의 가국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인·민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하고 다수를 권력의 질서에 포섭하려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한, 담론 실천을 통한 주체 구성의 위치가 바로 ‘국민’이었다. 분할, 분리, 선택, 배제를 근간으로 한 근대의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분법적 정체였다.

요컨대 일제 말기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담론의 조직화된 작동은 전체주의 파시즘의 영토 확장 욕망을 아래로부터의 합의로 위장코자 하는 일종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의 행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람시(Gramsci)가

말한, 헤게모니 정치학이다. 그람시는 힘(force)과 합의의 조합에 의한 헤게모니 행사를 의회주의 정권의 정상적 특성으로 꼽는다. 그러나 전쟁하는 일제 식민지의 반민주적, 비의회주의적 상황에서는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 말기로 이행하면서 일제는 헤게모니보다 지배(domination)라는 훨씬 직접적인 '위로부터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절대 우월성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폭력을 수반하는 힘이 자발적 합의와 병행되었고, 후자는 사실상 전자를 배후로 하는 유사/거짓/억지 합의에 불과했다. '국민'에는 이처럼 지적, 도덕적 지도력의 욕망과 더불어 폭력적, 강제적 지배의 의지가 이중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이념적이면서 폭력적인, 포함하면서 동시에 배제하는 '국민'의 이중성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 내 지속 작동한다.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싹터 식민주의를 따라 이 땅에 이식되고, 가부장주의와 접합되어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관장하는 파시즘의 가국 체제를 지속 가능케 하는 것도 다름 아닌 '국민'이다(이득재, 2001).

'국민'의 기원에 대한 본 연구의 시선은 결코 과거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비판과 미래의 생성, 즉 모순 현실의 급진적 재구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민'의 전체(주의)적인 야만성과 퇴행성은 21세기 한국사회 전혀 극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식민주의는 국가주의로 형태를 바꾸지만, '국민'이라는 지배적 정체성은 변함없이 강제된다. 그 이데올로기와 담론, 정체성은 친일의 구조에 의해 복귀되고, 반공의 체제에 의해 강화되며, 억압적 국가에 의해 통치 전략으로 활용된다. 바로 이 획일화되고 경화된 전체(주의)적 언어와 정체, 심성의 체제를 내부 파열시켜는 게 남아 있는 과제다. 다양한 감수성, 지성, 욕망의 분자적 흐름들로 내파 시켜야 할 것이다. 실재하는 이성애자와 혼혈아, 세계시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특이성들은 결코 '국민'이라는 단일하고 절대적인 수목 체계 하에서 평화·평등·평온한 관계로 공존할 수 없다. '국민'은 근본적으로 다면적인 생태문화사회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민'의 전체주의적 정체성과 집착증적 담론, 파시즘적 이데올로기는 다양하게 폭발하는 특이화의 코드들로서 탈 중심화되어야 한다. 감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화/언어/매체 민주화의 길이

다. 신민/주체(the Subject) 해방의 선언이다.

다양한 ‘뒀’의 시도, 탈주의 실험을 ‘비국민’되기, ‘국민’ 영토 바깥으로의 도망하기, 반 ‘국민’적 정체성의 횡단 선 구상으로 구체화시켜 보는 노력은 생태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비판적 문화연구, 진보적 문화운동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체의 호명과 구성, 탈구의 실천에 주목하는 매체문화연구에 있어 결정적이다. 제작과 텍스트, 수용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담론과 정체성, 이데올로기서의 ‘국민’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 없이 매체의 한계에 대한 비판, 매체의 잠재성에 대한 탐색은 불가능하다. 가타리(Guatarri, 2003, 49쪽)가 말하는 “복수의 주체 집단이 매체를 재전유하는 것”으로서의 탈-매체화 운동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거부로 시작되어야 한다. 강 정구 교수를 ‘비국민’으로 지목하고,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며, ‘공산주의자’로 몰아 추방코자 하는 집단 광기의 추태가 오늘날에도 버젓이 벌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이라는 전체주의 정체성, 이데올로기, 담론 탓이 크다. ‘국민’은 떼어낼 수 없는 폭력성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살해하고, 민주와 평화를 방해한다. 만약 문화연구가 ‘인·민의 삶(the popular)’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국민’에 불편하지 않는 문화연구는 참으로 이상한 문화연구가 된다.

◆ 참고문헌

- 나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2002). 『국민이라는 괴물』. 서울: 소명출판.
 도리야마 이치로. 임성모 (역) (2002). 『전장의 기억』. 서울: 이산.
 신명직 (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야마다 쇼지. 정선태 (역) (2002). 『가네코 후미코 : 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일본 제국의 아나키스트』. 서울: 산처럼.
 이득재 (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서울: 이산.
 이효덕. 박성관 (역) (2002). 『표상 근대의 공간』. 서울: 소명출판.
 임종국(1991). 『실록 친일파』. 서울: 돌베개.

- 임종국 (1966). 『친일문학론』. 서울: 평화출판사.
- 정운영(편) (1997).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서울: 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 최유리 (1997).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펠릭스 가타리. 윤수종 (역) (2003). 『세 가지 생태학』. 서울: 동문선.
- Althusser, L. (1971). *Lenin and Philosoph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최초 투고 2005.9.1, 최종원고 제출일 2005.10.31)

Mobilization of Gookmin, Formation of 'Gookmin'

A Historical Study of the Discourse of 'Gookmin' in Korea

Gyu-Chan Je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elevis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article aims at investigating the origin of 'gookmin', which is currently working as the dominant discourse and leading identity in the South Korean society. Like 'nation', 'people' or/and 'citizen', the term of 'gookmin' is a very much particular and historical outcome of the colonial modernity. Nevertheless, however, there have been not so much serious socio-linguistic, cultural-political studies about its root. It i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quite important to trace back the birth of 'gookmin', which is working as an ideological, epistemological frame in/between subject and realit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will consider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key period of the birth of 'gookmin'. It will then critically scrutinize how the total mobilization system by adopted the colonial government has formed the discourse and subjectivity of 'ookmin' based on various physical apparatuses. By revealing that a totalistic nation/state of Japanese colonialism is behind 'gookmin', which wanted to mobilize every individuals into a so-called article of empire,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e fascist and propaganda nature of 'gookmin' continuing even after the liberation. As a historical-materialist work of deconstructing the dominant discourse of 'gookmin', this study will basically take a cultural studies approach.

Key words : Gookmin, Japanese Colonialism, article of empire, Total mobilization system, ideology, family-state system